

광주시, 통합 맞춰 '라이즈사업 초광역' 대응

'초광역분과위' 구성...현안 조정·협력과제 발굴 위원회, 17개 대학 평가...4개 등급 차별 지원 인재·취업 연계 '지역형 계약학과' 추진 논의

광주시가 '광주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1차년도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교육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광주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광주 라이즈위원회'를 열어 라이즈 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광주 라이즈(RISE) 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1차년도) 광주 라이즈(RISE) 자체평가 결과(안), 광주·전남 통합 대비 초광역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안), 광주시 RISE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가칭) 지역형 계약학과 추진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년 광주 라이즈(RISE) 자체평가 결과(안)'에 따라 광주 라이즈(RISE) 사업을 수행한 17개 대학에 S(3곳), A(6곳), B(5곳), C(3곳) 등 4개

등급을 각각 부여했다.

등급은 광주 라이즈(RISE) 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자체평가 점수에 따라 결정했으며,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대학은 9월 이후 특전(인센티브)을 부여받게 된다. 특전(인센티브) 규모는 교육부의 시도 연차 점검 결과 이후 확정되는 국비 지원액에 연계해 추후 결정된다.

위원회는 또 광주·전남 통합에 대비해 '초광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 초광역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 운영한다. 초광역 분과위는 광주·전남이 합의해 각 6명씩 추천, 총 12명 규모로 구성한다. 초광역 분과위는 통합특별시 단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기존 시도별 라이즈(RISE)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 현안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초광역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광주시 라이즈(RISE)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안)'을 의결, 사업비 집행기준에 교육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광주라이즈(RISE) 위원회'에 참석해 '2025년(1차년도) 광주 라이즈(RISE) 자체평가 결과(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지역형 계약학과 추진계획(안)'의 추진 방향과 세부 사항 등도 논의했다. 지역형 계약학과는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지·산·학·연 협력형 신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수정사업계획상

담(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부 연차 점검에 대비한 성과 중심 환류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라이즈(RISE)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역대급 폭염 온다...시, 9월까지 종합대책 가동

보호대상자 10개 유형 개편...취약계층 밀착 보호 대책비 전년 보다 약 2배 투입...그늘막 신규 설치 등

올여름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가 폭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광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약 2배 늘어난 폭염대책비(재난안전특교세) 17억원을 투입하고, 광주시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폭염 보호대상은 기존 4개 분야 15개 유형에서 3개 분야 10개 유형으로 개편

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생활지원사 1000여명을 투입해 평상시에는 매주 방문 1회, 전화 2회를 실시하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매일 방문·전화로 전향해 안부를 확인한다.

또 마을의 통장, 관련 단체, 시설 등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무더위쉼터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만성·기저 질환자는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 대비 건강관리 용품을 지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군의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염상담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폭염 상황에 맞춰 물품과 응급 잠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농업인, 이동노동자, 건설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피해 예방 예방 활동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자제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 여부와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계획이다.

배달·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를 위해 공공쉼터 34개소와 24시간 무인쉼터인 '쉬소' 1곳, 시민참여형 쉼터 '쉬고' 2곳을 가동하고 편의점 쿠폰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는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버스 정류장 냉각·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속 스마트 쉼터 2개소를 신규 조성해 운영한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올여름 기후 변화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안전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저감시설 관리부터 노약자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 보호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작년 지방축제 흥행...관람객 1431만명 역대 최대

한국관광공사 분석...외국인도 2년 연속 10만명 총소비 4639억원·경제파급 효과 5827억원 분석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1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참가자도 2년 연속 10만명을 넘어 K-축제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일 이력 내용이 담긴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관광공사가 지난해 정부 선정의 문화관광축제 65개 가운데 개최가 취소된 3개를 제외하고 62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축제 총방문객은 1431만명으로 집계됐다. 방문객 수는 지난 2018년 1157만명을 시작으로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 방문객도 2024년 10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2년 연속 10만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방문객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9.3%로 가장 많았고, 60대(18.3%), 30대(15.9%), 40대(15.4%), 20대(14.3%), 70대 이상(9.0%) 등의 순이었다.

방문객 중 20대의 비중은 2018년 17.7%에서 지난해 14.3%로 줄었지만, 60대 이상의 비중은 확대하는 흐름이다.

단일방문자와 재방문자의 비율은 각각 72.8%, 27.2%였다.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축제 비중은 2018년 69.8%에서 2025년 88.7%로 늘었다.

지난해 축제 총 소비금액은 4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올랐다.

업종별로는 식음료(48.4%)에 가장 많이 썼고, 쇼핑(35.7%), 운송(7.4%), 여가서비스(4.1%)가 뒤를 이었다.

방문객 1명이 축제 1회에 소비한 평균 액수는 3만2415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7만6091원), 외지인(5만3951원), 현지인(14800원) 순이었다.

전체 축제 예산은 1055억2000만원이고, 축제당 평균 예산은 17억원이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문화관광축제로 총 582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고, 축제 당 하루 평균 15억여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했다.

축제에 참여한 일부 관람객이 해당 지역에 숙박하며 지출한 금액과 축제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상 긍정적인 언급량 등을 토대로 산출한 총 사회적 파급효과 6000억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지하철, 리튬배터리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금지 광주교통공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광주교통공사는 광주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도록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했다.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전자자전거와 일반 용량의 4배 이상인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이

동 보조장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사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역사 내 안내문과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밀폐된 도시철도 공간에서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윤석열 6일 첫 공개소환...사복차림·포승줄 예상 특검, 김용현·이상민 등尹정부 핵심 줄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범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균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반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시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균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에 임검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게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운영기간 연장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특별수사단은 1일 "앞서 운영 기간을 5월 31일까지 1차 연장했으나 경찰 협의 과정 및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2차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

라며 "신속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월 출범 당시 총 48명이 투입됐던 수사단은 20여명 규모로 재편됐다.

단장은 기존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에서 수사팀장을 맡던 한동훈 총경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